

〈散稿〉

대만인가 중화민국인가?^{* **}

韓寅燮***

〈장개석기념관〉이 〈대만민주기념관〉으로

2년전(2006년) 여행사 관광객으로 대만에 며칠 머문 적이 있다. 안내인이 이끄는 대로 간 곳들은 전형적인 사진찍기용 기념물이었다. 대만의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것이 <타이베이101타워>라면, 현대 대만의 정치적 상징으로서 선택된 것이 장개석의 <중정기념관>인 듯 했다. 둘 다 높고 우람했다. “높을수록 위대한가봐, 권력과 돈은!” 하는 인상만 남았다.

절대의 권력은 시민들을 우러러 보게 만든다. 거대한 광장은 시민들을 왜소화시킨다. 권력자의 동상이나 기념탑은 위압적으로 서민들을 내려다본다. 다만 천수이볜과 민진당을 거칠게 비판하는 안내인을 보면서, ‘그래 대만도 이만큼 비판의 자유를 구가할 수 있구나’ 하고 대충 생각하고 지나쳤을 뿐이다. <228 평화공원>은 상투적인 관광일정엔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았건만, 억지로 시간을 할애했는데 하필이면 월요일이라 기념관은 문이 닫혀 있어 아쉬웠다.

이번엔 달랐다. <228사건기념기금회>의 초청으로 왔기에 대만의 살아있는 역사와 지사들을 대면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228사건과 인권정의, 대국패권 or 소국인권』이란 주제의 국제학술회의는 대만국가도서관에서 개최되었다.

* 이 글은 2008년 2월 23일-2월 24일 대만 국가도서관에서 개최된 228사건기념기금회 주최한 국제학술회의가 계기가 되어 쓰여졌다. 학술대회의 타이틀은 <228사건과 인권정의 ‘대국패권 대 소국인권’(Taiwan’s Human Rights or China’s Hegemony)>였고 필자는 이 자리에서 5.18재판, 국가폭력과 법률심판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필자를 주로 안내한 朱立熙 선생은 한국특과원을 수차 역임하고, 특히 1985년부터 88년까지 한국특과원으로 한국민주화에 관한 매우 뛰어난 보도를 계속한 바 있으며, <國家暴力與過去清算>(從韓國518看臺灣228)(允晨文化, 2007)을 저술한 바 있다.

** 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8학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가도서관의 맞은 편에 바로 지난번 관광했던 중정기념관이 자리잡고 있었다. 정문의 위용은 그대로인데 뭔가 달랐다. 겹지붕 대문의 현판은 2년 전 봤을 때엔 장개석의 호(中正)를 따 ‘大中至正’이라 새겨있었는데, 그 제호가 있던 바로 그 위치에 ‘自由廣場’으로 제호가 바뀌어져 있었다. 이 정도의 명칭 변경에는 수많은 주장과 사연이 들어있을 터. 확인해 보니 민진당 집권 제2기를 맞아 벌어진 정명운동의 정점에 중정기념관의 명칭변경이 있었던 것이다. 논란 끝에 작년 12월 8일 새 현판이 걸렸다 한다.

자유광장 대문을 들어서면 대광장이 펼쳐진다. 그 나라 정치의 독재화 정도는 그 나라의 상징광장의 크기에 비례한다. 넓은 광장을 한참 걸어가면 중앙에 천단(天壇)마냥 우뚝 솟은 건축물을 대한다. 가파른 계단을 4층 높이까지 올라가면 <중정기념관>의 메인홀에 이른다. 대만관광의 필수코스니까 여행객 중에 이 곳을 들르지 않은 분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 기념관 안에는 장개석의 청동좌상이 안치되어 있다. 그 청동대청(靑銅大廳)이라 부르는 홀의 입구에는 육중한 철대문이 있고, 홀 안에는 총통의 대동상이 관람객을 자애로운 미소로 내려다본다. 3층 이하는 장개석의 주요 활동을 전시해놓은 종합전시관이다. 전시관에서 장개석의 모든 면을 익히고는, 천단에 와서는 이 영생불멸의 총통상을 경배하도록 순서가 잡혀있다.

그런데 그 <중정기념관>의 현판이 <대만민주기념관>의 현판으로 대체되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식 변화! 그 동안의 노력을 거쳐 올 1월부터 육중한 대청의 철문이 활짝 열렸다. 그 실내에는 대만의 교육부, 문건회(文建會), 그리고 228사건기념기금회의 3개 단체가 기획한 특별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민주의 문을 열고, 자유의 바람이 분다>(民主開門 自由風吹)는 기획구호에 맞추어 특별전시전이 열리고 있었다.

아직도 장개석의 힘은 굳건하다. 국민당과 대척하고 있는 민진당이 8년을 집권해도, 국민당의 당국국가(黨國國家)의 틀을 해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회도 장개석의 동상을 해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개석의 좌대동상을 온존시킨 채, 실내공간 전체를 자유와 민주주의 공간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자유가 바람이라면, 바람을 느끼게 해주어야 할 터. 바람에 가장 어울리는 것은 나비와 연, 그리고 바람타는 배일 것이다. 좌정한 장개석의 눈길이 닿을만한 모든

1) 중정기념관은 2007. 5. 19. 대만민주기념관으로 개칭되었다. 민진당 정권 제2기를 맞아 추진된 <정명운동>의 일환이며, 이 개칭을 맞아 장총통을 고별하는 특별전이 개최되었다.

공간엔 연과 나비와 조각배가 경쾌하게 떠다닌다. 엄숙주의의 가면을 벗기고, 독재자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좌우측엔 판넬벽을 세워, 대만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역정을 제대로 조명할 수 있도록 했다. 동상 뒤편의 좌우측 벽면은 추모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228과 백색테러의 수난사망자 명단>을 새겨 넣었다. 상단에는 사망자의 명패를, 하단에는 대만정신을 상징한다는 애도의 백합꽃으로 벽을 채웠다.

이렇게 장개석이 독점하던 실내는 그의 치하에서 희생된 자들을 위한 추모의 공간이자,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역정을 알리는 알림판으로, 나아가 독재자의 면전에서 자유와 민주의 바람을 느끼게 하는 개방공간으로 멋지게 재편되었다. 과거의 파괴가 아니라 과거와 공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최선의 미학적 전시를 해낸 것이다.

정명운동의 전개

중정기념관을 재편할 정도로 민진당 치하의 정명운동(正名運動)은 전방위적으로 전개되었다. 대만의 첫 관문인 <중정국제공항>의 이름이 <도원국제공항>으로 바뀌었다. 중화우정국도 대만우정국으로 바뀌어 중화란 이름 자체도 지워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고 대만이 무슨 자유의 천지, 과거청산의 모델로 승격될 정도라는 것은 아니다. 중정기념관만 하더라도 그것을 대만민주기념관으로 재편하려고 했을 때 반대가 적지 않았다. 심지어 금년 3월에 실시될 총통선거에서 국민당 후보인 마잉주(馬英九)는 자기가 당선되면 다시 중정기념관으로 복원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민당은 지난 8년간 총통직은 놓쳤지만, 사회 전체의 지배구조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 주요한 국가기구인 관료·사법·언론·군대 등에는 국민당이 압도적이라 인적 청산을 시도할 수 없었다.

호텔에서 TV를 켜니, 마잉주와 세창팅(謝長廷) 두 총통후보가 TV토론을 하고 있었다. 유튜브도 활용하는 최신 기법은 다 동원되었지만, 눈길을 끌었던 것은 화면 하단에 ARS 지지여론조사였다. 내가 본 시간까지는 국민당 후보(馬英九)는 38,000표를 얻고 있었는데, 상대방 민진당 후보(謝長廷)은 2,700표를 얻는데 불과

했다. 그런 선입견으로 보니 국민당 후보가 말투와 느낌도 세련된 반면, 민진당 후보는 뭔가 따지는 논객처럼 보였다. 그런데 실제 지지율의 격차는 10% 내외라고 들은 바 있어, 어떻게 ARS에서 10배 이상이나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알아보니, 주요 TV와 신문은 전적으로 국민당 편향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입사과정에서도 대만사투리가 배어있는 지원자는 탈락시키는 정도에 이르다 보니, 기자들 중 대다수가 외성인들 자녀들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아까의 ARS를 참고한다면, 적어도 시민들은 압도적으로 국민당에 편향된 TV 뉴스물을 매일 대하고 살아가야 하는 셈이다. 대만발 정치보도를 읽을 때 이런 점을 유의해서 독해해야 할 것이다.

장개석은 얼마나 건재한가

장개석은 1975년에 사망했고, 이어 집권한 아들 장경국은 1988년에 작고했다. 그럼에도 장개석은 처처에 존재감을 드러낸다. 대만화폐 중 지폐와 동전 모두에서 장개석이 자리한다. 그야말로 집집마다, 내 호주머니 속에 임재하고 계신 셈이다.

대륙에서 인민의 지지를 상실하고 대만으로 쫓겨온 장개석은 대만에 완벽한 가권통치(家權統治)의 왕국을 조성했다. 장개석은 ‘세기의 위인’, ‘민족의 구세주’로 찬양되었고, 그의 호 ‘중정’의 이름을 붙인 학교, 공원, 도로는 셀 수 없이 많았다. 최근까지도 학교마다 장개석 동상이 있었으며, 거리 곳곳에 장개석 동상이 있었다. 교실에는 그의 사진이 모셔져 있었다. 그의 담화는 시험 교재로 되어 학생들은 이를 암송해야 했다. 그의 이름에는 반드시 존칭을 써야만 했다. 총통이니 蔣公이라 호칭해야 했다. 공공장소에서 그의 존함을 들을 때, 부동자세로 자세를 가다듬어야 했다.

이러한 신격화운동은 1975년 사망한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 대만민주화의 과정에서 점차 하강하였다. 지금 장개석 동상은 거의 철거 완료 중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저항도 없을 수 없어, 일부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대만국가도서관 근처를 돌아보니까 한 초등학교 교정에 장개석 좌상을 발견했다. 많은 동상을 철거하자, 그 동상을 모아 전시한 공원도 있는 모양이다. 장개석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임재하고 있기도 한 그런 상태에 있다.

대만인가, 중화민국인가

고구마같이 생긴 이 섬나라를 어떻게 이름부를 것인가——이 질문 자체에 국가정체성의 핵심쟁점이 들어있다.

한국(남한)과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었던 장개석 시절엔 중화민국(中華民國)이란 공식 국호가 대내외적으로도 통용되었다. 중화민국은 1911년 신해혁명으로부터 기산되는 중국 전체의 통칭이었고, 국민당은 여전히 그 입장을 고수한다. 지금도 연호는 ‘민국 97년’ 식으로 칭해진다. 장개석은 이 중화민국의 국호를 대륙에서 유지했으며, 섬나라로 탈출한 뒤에도 정통성있는 유일 중국정부로서의 입지확보를 위해 중화민국의 국호를 견지했다. 더욱이 공산중국에 대응하여 ‘자유중국’으로도 표방했다. 그에게 이 섬은 대륙완정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기지에 불과한 것이었다.

아예 타이베이시 자체가 소중국이다. 타이베이시의 모든 도로명은 중국지도의 압축판이다. 시의 북쪽에는 장춘로, 길림로로부터 남쪽으로 오면 남경로, 서쪽에는 중경로 등으로 구성하여 반나절이면 중국 전체를 도는 듯한 환상에 빠질 수도 있다. 머릿속이 대륙중국으로 채워진 망명집단들의 꿈은 도로명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섬나라에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러한 중화민국상은 외부로부터 덮씌워진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중국이기 위해서 대만적인 것은 체계적으로 억압되어야 할 것들이었다. 외성인 혹은 대륙인에 의한 대만인의 탄압 중 최악의 참사가 바로 1947년의 2.28학살이었다.

1945년 일제가 물러나고 대만은 중국의 복건성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국민당의 대만통치는 정치적으로 낙후되었고, 경제적인 불경기에도, 사회적 불안정, 민심불안 등으로 주민들의 원망이 쌓여가던 중이었다. 1947년 2월 28일 타이베이시에서 연초밀매에 대한 단속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민중이 충돌했고, 그에 대해 민중들이 행정장관의 공관 앞에 몰려가 항의시위를 벌이자 헌병들이 발포한 데서 주민살상이 시작되었다. 그 때부터 10여일간 대만 전역에서 주민들은 항의시위, 파업, 시장폐쇄 등으로 맞섰다. 국민당정부는 계엄령을 하달하고, ‘청향(淸鄉)’이란 이름으로 무력진압을 벌였다. 국부군이 대만에 파병되어 무력진압을 하면서 수많은 민중들이 학살당하고 또 잡혀가서 처벌받았다. 피살자의 수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거의 2만명 이상의 대만인들이 학살당했다고 한다. 한국의 제주4.3과

유사한 비극이 1년 먼저 대만에서 펼쳐졌던 것이다.

국부군은 1949년 대만으로 쫓겨오자마자 대만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1949년부터 1987년까지 무려 38년 동안 계엄령이 지속되었다. 계엄 치하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은 박탈당하고, 공포 속에서 살았다. 계엄령 시기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많은 정치적 반대자나 대륙에서 넘어온 자들을 비첩(匪諜)으로 몰아 단심군사재판을 거쳐 엄혹한 형벌을 가했다. 수천 명이 처형되고 수십만 명이 수감되었다. 이를 묶어 대만의 백색테러라고 부른다.

계엄령 치하에서 228은 언급할 수조차 없는 금기사항이었다. 일반인들은 228의 진상을 알 길이 없었다 이렇게 대만인들에 대한 대량학살을 강제침묵시킴으로써, 또 국민당정권에 대한 어떤 반대를 백색테러의 방법으로 처벌함으로써, 장개석 부자는 절대적 위권통치의 시대를 지속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228의 진상규명과 신원운동(伸冤運動)은 1987년 전후하여 비로소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1987년에 228화평일축진회가 성립하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平反冤屈), 수난자 가족들에 대한 위무, 수난자 명단의 등재, 기념비 및 기념관의 건립 등을 요구했다. 또한 매년 2월 28일을 화평일로 제정하여 기념할 것을 요구했다. 실로 사건 발생 40년 만에 공개적으로 228의 진상조사와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반국민당운동이란 저항적 방법이 아니라 공의화평운동(公義和平運動)이라는 매우 조심스러운 형태로, 화평과 기념 위주의 운동을 전개키로 한 것이다.

228사건은 우여곡절 끝에 진상조사보고를 정부 차원에서 발간하고 보상작업을 마무리했다. 1995년에는 228평화공원이 조성되고, 거기에 228기념비가 세워졌다. 그 제막식에 국민당의 이등휘 총통은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민국정부의 1947년의 무력진압에 대하여 전국민에게 사죄했다. 이등휘 총통 자신도 대만인으로서 228사건의 수난을 받은 수난자 가족의 일원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같이 228은 대만인의 국가정체성을 가름하는 핵심사건이다. 대륙은 청나라든, 민국이든, 국민당이든, 모두 대만인들에게 압제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국가정체성을 ‘대만인’으로 하지 않고서는, 할아버지 세대는 청나라, 부모 세대는 일본인, 자녀세대는 중화민국 소속으로 표류해온 불행이 되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대만은 과연 무엇인가, 모두 외세의 일부로서 자리매김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외생적 자기규정의 결과가 228과 같은 참화를 빚어내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치화하게 되면, 대만독립선언이 나오고 대만독립연맹과 같은 정치적 활동이 나온다. 이들은 국민당 식의 ‘중국화’에 반대하여, ‘탈중국화’ 혹은 ‘독립된 국가로서의 대만’을 추구한다. 독립국가로서의 대만의 UN가입운동이 대만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정치적 움직임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국민당 측은 자신의 국가정체성을 독립된 섬나라인 대만이 아니라 중국의 일부로 생각한다. 그동안 민진당 정권 하에서 ‘중국’이란 용어 대신 ‘정명운동’의 이름 하에 ‘대만’으로 명칭변경한 것에 대해, 국민당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를 다시 바로잡겠다고 버른다. 그들은 정치적·외교적으로 불가능한 대만독립의 주장이 아니라, 중국과의 평화협약을 맺고 몇십년동안 (중국반환 이전의) 홍콩과도 같은 지위를 누리하고자 한다. 과거에 공산주의를 철천지 원수로 여겼던 국민당이건만, 지금은 대만과에 맞서 오히려 대륙과의 양안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의 적은 우군이 되는 것처럼, 대만독립과에 맞서 공산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대륙중국이 볼 때 대만독립과는 대국패권을 방해하는 존재이며 이를 용인했다는 티베트, 위구르 등 중국변방의 자치와 독립에 자극을 줄 것이므로 이를 용납할 리 없다. 그러나 대만독립과, 즉 민진당의 집권화를 선불리 공격했다가 오히려 천수이볜의 재집권에 기여한 바 있어(중국판 북풍), 지금은 대만 총통 선거시에 발언을 오히려 자제하는 것 같다.

대만과인지 중국과인지는 대번에 알 수 있다. 대만과는 결코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소개하지 않는다. 반대로 중국과는 자신을 쉽게 대만인이라고 소개하지 않는다. 더욱 큰 장벽은 언어이다. 대만말은 대만출생자(내성인)에게는 모어(母語)이다. 그 모어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집에서, 마을에서 배운다. 공식사회는 북경어를 쓴다. 중국화를 강조하는 측은 당연히 북경어를 쓰지만, 이번 학술회의에 참가한 228희생자 유족들은 수시로 대만어로 질문하고 주장했다. 이들 대만어는 대만에서 수십년을 살면서 중국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국인 교수도 중간에 통역불가를 토로할 정도로 비대만인에게는 하나의 암호같은 차단벽이 된다.

앞으로도 대만화(독립화)와 중국화의 주장은 커다란 정치적 쟁점이자 사회적 갈등의 원천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대만이 대국패권의 일부로 자처하면서 실리의 교로 나갈 것이냐, 소국인권을 내세우면서 자결권을 강조할 것인가 하는 쟁점은 그리 쉽게 타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국제정치적으로는 독립국가로서의

대만의 국제적 승인이 어렵겠지만, 그것이 가진 국내적 정치적 효과 내지 일정한 주민의 통합효과는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대륙중국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독립파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대만문제를 쉽사리 접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만과 한국의 관계는

냉전 시절 한국(남한)과 ‘자유중국’은 같은 반공국가로서 서로를 형제처럼 여기고 지냈다. 양측 모두 내전을 치렀고, 실지회복과 국토통일의 과제를 국시로 내세웠다. 한국인이 갈 수 있었던 중국은 대만 땅 밖에 없었고, 대만인들도 한국 영토 중에서 남한 쪽 밖에 방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서로를 배타적인 중국 혹은 한국으로 승인하는 관계였다. 내정에서는 양쪽 모두 독재국가란 점이 닮았다. 때문에 서로의 독재적 면모에 대한 비판은 삼가는 분위기였다. 한국에서는 장개석이 대만에 와서 경제 면에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주로 언급되었다. 일제하 중국에서의 한국독립운동, 특히 상해임시정부를 지원한 장개석의 면모까지 있어 장개석의 대만은 우리에게 호감의 대상이었던 셈이다. 더욱이 서로 독재하다 보니, 독재의 기법도 배우곤 했다. 덜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국의 유신헌법(1972~1979)에서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거수기형 대통령선출방식도 대만의 총통선출모델에서 한 아이디어를 얻었다.²⁾

대만 정치사에서 가장 큰 타격은 미-중수교 후 이루어진 대만과 미국과의 단교조치(1978년)였다. 그 대륙중국과 가장 늦게 수교한 나라가 한국이었기에, 국가단위로 볼 때 대만과 외교관계를 가장 오래 지속한 나라는 한국과 사우디 밖에 없었다고 한다. 1992년 들어 한국이 대만과 단교하자 대만은 그야말로 국제 고아가 되어 버렸다. 절친한 우방으로부터 배신당한 대만은 이후 한국에 대해 애증공존의 감정을 갖게 되었다. 한국의 스포츠나 뭔가가 잘 되면 비판적 기사가 쏟아져 나오곤 한 것도 이러한 애증공존의 감정에다 약간의 질시감이 가미된 탓이리라.

최근 한국 드라마에서 비롯된 한류바람이 대만을 강타하면서 한국에 대한 호

2) 유신정권은 유신헌법의 틀을 프랑스 제5공화국에서 연유한 것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대만의 장개석,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스페인의 프랑코 등 백색중신독재자들의 위권통치의 정부들을 연구하면서 이를 한국화한 것이 유신헌법상의 권력구조이다. 이러한 사실을 유신헌법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규명해낸 金哲洙 교수의 『헌법학원론』은 발간 직후 바로 수거당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감도는 급상승했다. 대만의 7성급 호텔인 원산대반점에 배용준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 호텔의 모든 객실이 동나는 사태는 널리 알려진 예이다. 내가 잠깐 방문한 기간에도 TV프로에는 태왕사신기, 명성왕후, 심지어 일요일 오락프로까지 그대로 방영되고 있다. 최고의 히트는 대장금! 대장금 방영시간에는 거리가 한산할 정도였다고 한다.

뜻있는 인사들에게 한국의 민주화과정 자체도 또 하나의 한류 역할을 한다. 비교적 조용한 개혁의 행보를 해왔던 대만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열정적인 민주화 투쟁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도 하다. 특히 경이스런 대목은 518과 관련하여 철권적 대통령의 처벌사례를 남긴 점이다.³⁾ 그에 반해 대만의 조용한 혁명(寧靜革命)은 사회적 갈등은 덜 유발했는지 모르지만 민주주의의 학비를 덜 치루었고, 그 때문에 민주개혁이 속속들이 파급되지 못한 채, 이제 망각기를 맞고 있는 듯하여 유감스럽다는 것이다.

대만에서는 아직까지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과거 정부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귀속이 재판을 통해 쟁점화된 적이 없다. 사법부 자체가 온전히 독립된 위상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228의 경우 처음으로 책임귀속의 문제가 법이론적으로 정식으로 제기되었다. 『228사건 책임귀속 연구보고』가 2006년 봄에 출간되었다. 이 책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공식 공문서가 되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처음으로 장개석을 “사건관여의 정도가 깊고, 관여내용이 다층적이며, 따라서 최고영도자로서 이 불행한 사건의 최대책임자임은 당연하다”로 판단했다.⁴⁾ 그러나 그 부분으로 인해 집필학자(책임자 및 3장 집필자)들이 장개석의 손자(현 국회의원)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기에 이르렀다. 작년 2월 이 사건은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확정되었다.⁵⁾

228사건을 비롯한 대만의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책임귀속의 쟁점에 있어 한국의 518재판의 법리와 체험으로부터 기꺼이 배울 태세이다. 다만 아직도 사법부의

3) 5.18의 경우에는 朱立熙, <國家暴力與過去清算>(從韓國518看臺灣228)(允晨文化, 2007) 참조. 이 책에는 한국의 518의 전개와 과거청산의 적용실례가 생생하게 기술되어 있고, 사진도 충실하다. 육지의 섬주민의 대량학살(屠殺)의 아픈 체험을 공유하고 있는 제주 4.3과는 긴밀한 공유의식을 갖고, 제주4.3연구소와 228사건기념회 사이에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방문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인권의 연대도 계속 발전 중이다.

4) 張炎憲 總編輯 總責任, 228事件 責任歸屬 研究報告(財團法人228事件紀念基金會, 2006), 168쪽

5)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르면 사건의 “시비곡직은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228事件紀念基金會, 二二八會訊, 2007/8, 23~25쪽.

판사가 국민당원인 데다, 사법부 자체가 영정사법(寧靜司法)의 소극적 분위기이고, 행정예의 굴종으로 인해 독립성과 인권의지를 보이지 못한다고 비판받고 있는 실정⁶⁾에서 그 재판의 현실적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럼 우리의 과거청산작업은 아시아의 모범일 수 있는가? 민주이행기의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는 것은 나라마다 쉽지 않는 주제이다. 어떤 경우든 권위주의세력의 지지기반과의 일정한 타협 속에 정의의 원칙을 구체화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따르는 것이다. 적어도 갓 출범한 민주화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정치과정 이 과거 세력들의 힘을 더 키워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 때문에 과거청산은 보복형 정의의 관철보다는 제한적이고 상징적 정의의 실현의 모습을 띠게 된다. 전/노재판의 경우에도 무엇이 불법이고 범죄인가를 확정함으로써, 사회정의를 바로잡고 적절한 수준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원상회복에 기여하는 수준의 선택을 한 셈이다. 아직 장개석-국민당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그 법적 쟁점화를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지 못한 대만의 입장에서 한국의 사례는 하나의 참조거리가 될 것이다.

물론 우리도 대만을 통해 확인하고 배울 것이 적지 않다. 518의 과거청산, 특히 보상의 문제에서 대만은 우리의 선례를 제공한 면이 있다. 국가기관(총통)의 사과는 한국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228문제는 적어도 민주화되어가는 공간에서는 덮어둘 수 없는 문제였기에 228의 해법은 대만의 민주화의 시금석이었다.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명예회복, 보상, 사과로 이어지는 228공의화평운동은 이제 정치적·법적으로 매듭단계에 와 있다. 기념사업도, 기념공원도 조성되었다. 그래서 한국의 518이나 민주화운동은 228공의화평운동과 서로의 체험을 교환할 만하다.

또 하나는 국민개병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 중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유사한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미 대만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시대를 종식시켰고, 이젠 대체복무의 길을 시행하고 있어, 그것이 우리의 경우에도 참고가 된다.⁷⁾ 이렇듯 어느 한쪽의 성취

6) 陳志龍, “亞洲霸權의司法歸順性與對抗性-檢討司法怠惰與司法人權”, 228事件紀念基金會國際學術會議 資料集, 大國霸權 小國人權, 2008, 283쪽 이하 참조.

7)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대만 대체복무제도 시찰 보고서**(2004. 5.), 출처: http://www.withoutwar.org/bbs/data/www_pds/050426대만_보고서.hwp

는 다른 쪽에도 시사점과 자극제가 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인권운동의 비교법적 지평이 열리는 셈이다.

21세기 대만의 장래는?

이제까지는 대체로 ‘대만화’를 추구하는 입장을 전달한 셈이다. 그런데 약간의 외형적 민주화를 이룬 나라에서 대체로 그러하듯 젊은 세대는 아예 정치나 이념에 관심이 없다. 돈벌이와 재미가 가치서열이 되는 신세대에게는 228주장도, 국가정체성 주장도 구세대의 피곤한 논쟁거리로 치부되기 쉬울 것이다.

21세기의 동아시아에는 중국의 패권이 갈수록 커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화패권이 지배할수록 대만의 독립화 같은 움직임은 대륙중국을 더욱 자극할 수도 있다. 대만화 주장은 국제사회의 진지한 호응을 얻지 못하고 대륙중국의 압력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다. 대국패권에 순응하면서 일국양제론(一國兩制論)을 표방, 중국과의 평화체제를 추구하는 국민당식 노선이 현실적 대안일 수 있다.

그러나 어디 인간이 빵만으로 사는 존재인가. 어렵지만 그래도 대만화, 독립화를 주창하면서 대국패권만 중하냐, 소국인권은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펼쳐나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현실의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약자의 주장, 그것이 ‘인권’이 아니겠는가. 그 점에서 228은 아직 미완의 과제이자 여전히 정치적 호소력을 가질 것이다. 과연 대국인 대륙이 앞으로 자기 맘대로 소국을 괴롭히려는 것을 막는 한 방법으로서 228로 압축되는 기억의 정치에의 호소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는가 말이다.